

충남발전연구원, '로컬푸드 활성화 국제컨퍼런스' 개최

-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위한 주체 간 거버넌스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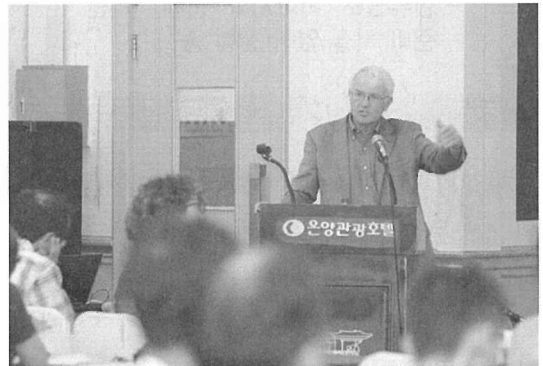
9월 7일 충남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로컬푸드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미국, 이탈리아, 일본, 국내 전문가들은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와 공동체 보존을 위해 무엇보다 주체간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 사회적경제 한마당'의 일환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각국 지자체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로컬푸드 정책사례를 통해 충남에서 현재 추진중인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과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 '지역사회 먹거리보장 연대'(CFSC) 공동창립자이자 로컬푸드시스템 전문가로 활동중인 '마크 윈'(Mark Winne, 미국)은 "최근 미국 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먹거리 섭취의 격차문제(비만, 결식 등) 해결"이라고 언급하면서 "미 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앞 다투어 '먹거리정책위원회'를 설립해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기관 급식에 지역 농가들을 직접 연결시켜 로컬푸드 공급을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 전담부서 조직, 민·관 거버넌스 구축, 관련법률 제정, 구체

적 사업 시행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3P(Projects, Partnerships, policies)라는 삼박자가 로컬푸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피사 대학교 '바네사 말란드린'(Vanes Malandrini, 이탈리아) 연구원은 "2007년부터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짧은 먹거리 공급사슬 프로젝트'(지역내 생산과 소비, 직거래 중심), 2010년 피사 시 로컬푸드 활성화 프로그램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만든 '먹거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슬로푸드 문화의 정착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네사 연구원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과 토론을 통한 먹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의식과 이들을 지속적으로 한데 모아나갈 수 있는 정치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키타현립대학 '타니구치 요시미츠'(Taniguchi Yoshimitsu, 일본) 교수는 "로컬푸드 활성화 추세는 세계화 속에서 생존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과 지역의 대응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농민들과 지역공동체를 보

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키타현에서는 지산지소, 즉 직판장, 농민장터, 학교급식, 식교육, 로컬푸드식당, 유기농축제 등 다양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활동 등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자(농민), 시민사회(소비자), 정부(공공) 등 각 주체 간 거버넌스와 균형잡힌 노력이 필요하며, 로컬푸드를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바라보지 말고 비경제적 가치(품질, 건강, 농업의 다기능성, 문화, 환경, 지역공동체) 등도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남발전연구원 허남혁 책임연구원은 “향후 충남에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지역순환식품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남도의 거버넌스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도내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과제는 농업정책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영역(보건, 환경, 문화관광 등)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광범위한 식품산업정책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행사 좌장을 맡은 충남연 박진도 원장은 “충남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역순환식품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바로 ▲사회적경제, ▲내발적 발전, ▲순환과 공생이라는 키워드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식”이라면서 “선진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전 세계적 식량위기는 물론 가깝게는 충남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로컬푸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충남의 먹거리 증진’을 목표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연구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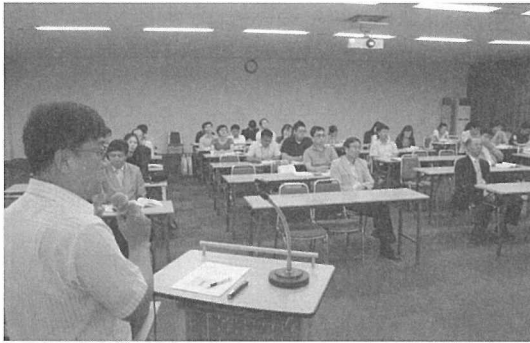
“충남지역 농업의 산업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충남발전연구원 · 한국농업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충남지역 농가소득의 양극화현상을 해결하고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어업6차산업화’와 ‘광역브랜드’ 활성화 전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유학열 박사와 정현희 전임연구원 등은 8월 23일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하계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충남연 유학열 박사는 “농어업의 6차산업화는 지역 농산물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제품화, 유통, 서비스 등을 융·복합한 것을 말한



다.”면서 “1차×2차×3차산업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선도적 농장형 체험농원 조성, 홍보마케팅, 다양한 직거래를 통한 유통 혁신,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성공사례를 들며 “이를 위해 농어업6차산업화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지원조직 설치, 다양한 6차산업화 영역 발굴 등의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충남연 정현희 전임연구원은 “소비자는 제품 자체를 구매하기보다 브랜드 지향적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으뜸Q마크는 1996년 시작 이후 현재 271건이 등록되어 있으나 타 시도 광역공동상표인 ‘경기도G마크’ 및 ‘임금님표 이천’ 처럼 전담운영조직이 없어 지속적 관리·운영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지사 추천 ‘으뜸Q마크’와 각 시·군 단위 브랜드 간 상호협력체계가 미비하고, 타 시도 브랜드에 비해 홍보역량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략적 홍보 관리를 위한 운영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임연구원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으뜸Q마크’는 도지사 인증 내지는 추

천이 아닌 지역성을 내포한 ‘대표 브랜드’ 여야 하고, 일반 농산물 및 시·군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변화시켜야 하며, 브랜드 지원·품질검사·홍보마케팅 등을 전담해 운영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충남발전研, 지방분권 실현 모색 한·일 공동 심포지엄 개최

충남발전연구원과 일본 자치체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방분권·자치 실현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진도 충남연 원장, 일 자치체학회 참가자,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3일 충남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세종시 출범에 즈음하여 충남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아젠다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에 대한 한-일 간 학술교류와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홋카이도 ‘카타야마 켄야’ 니세코초장은 니세코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주민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이는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라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해왔던 활동이나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치도구, 즉 마을의 헌법”이라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한국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국가권력의 집권화로 인해 소득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추세”라면서 “결국 지금까지의 ‘국가주의 자치분권’을 극복하고 지방의 권력이 지역시민사회 내부로부터 생겨나며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박사는 “한국의 지방분권 추진은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지방이양 행정과 부족한 재정 지원,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실천적인 지방자치는 현실 기반의 주민 참여와 자치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린자치협의회 설치 ▲마을조성 및 관리계획 조례 제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장치 마련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남대 육동일 교수의 좌장으로 호세이대학 신용철 준교수, 히로시마현립대학 요시카와 토미오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박사, 세종시출범준비단 이재관 단장, 공주대 이정만 교수, 자치체학회 히로세 카츠야 기획부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특히 히로시마현립대학 ‘요시카와 토미오’ 교수는 “대부분 작은 자치가 좋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정문제, 고령화 등 자치제도 유지가 어려워 합병을 진행중이다. 결국 핵심은 ‘지속가능성’에 있다.”라면서 “또한 현재 일본은 우체국 민영화 논란으로 갈등이 큰데, 민영화가 되면 과연 작은 마을주민까지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등 ‘효율성’과 ‘민주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출범준비단 이재관 단장은 “세종시는 일본의 시정촌과 도도부현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곳으로서 아직 인구 10만 남짓의 단일화 구조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나 지역균형발전 등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재정이나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시험무대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그리고 향후 50만명 규모로 커지게 될 세종시로 들어오는 외부적 과제는 거버넌스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지방분권은 학문적 논의와 현장의 실천으로 해결될 것이며 관련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마을 조례가 법보다 위에 있다는 자부심으로 ‘니세코’ 마을을 키워나가는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충발연과 자치체학회 참가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심포지엄에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 지방분권 차원의 세종시 출범의 의미와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